물흐름 효과의 개념 및 사례 분석

1 물흐름 효과의 개념

○ 물흐름 효과(Trickle-down effect)는 **대기업의 성장이나 고소득층의 소비증가**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·저소득층 등 **낙후부문의 혜택**으로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지칭

-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**滴下효과, 하방침투효과** 등으로 번역됨

○ 넓은 의미로는 경제의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전달되는 효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

- 좁은 의미로는 감세로 인한 세수증대, 고용증대, 경제활성화를 의미하는 **「공급경제학」 또는 「레이거노믹스」와 동의어**로도 사용

2 소비에 있어서의 물흐름 효과 측정 (고소득층 소비와 중하위계층 소비의 연계효과 추정)

※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 "부유층 소비가 저소득층 소비로 이어지는 물흐름 효과가 2001년 이후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"고 분석되었다고 보도(한국일보 10.21)

o 물흐름 효과의 존재 여부

- 최근 두 차례 소비증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 소비가 중하위계층 소비보다 선행하는 **물흐름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**하는 것으로 판단

〔**사례1**〕 **01~02년중** 소비 증가시 상위 소득계층부터 소비가 늘어난 후 점차 하위 소득계층 소비도 증가

* 민간소비(%) : **(01) 4.9→ (02) 7.9**→ (03)△1.2→ (04)△0.5

<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(실질, 전년동기비, %) >

	01.3/4	4/4	02.1/4	2/4	3/4
· 상위계층(20%)	7.7	2.3	4.2	0.9	△5.4
· 중위계층(60%)	5.4	7.9	5.2	5.2	2.5
· 하위계층(20%)	6.6	5.9	6.4	12.3	6.5

〔사례2〕 94～95년중 소비 호조시에도 대체로 상위 소득계층에서 하위 소득계층으로 소비증가가 이어짐

* 민간소비(%) : (93) 6.0→ (94) 8.4→ (95) 9.9→ (96) 6.7

<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(실질, 전년동기비, %) >

	94.3/4	4/4	95.1/4	2/4	3/4
· 상위계층(20%)	6.1	12.7	4.2	3.0	4.1
· 중위계층(60%)	5.7	8.1	9.7	6.0	7.4
· 하위계층(20%)	6.3	9.2	6.1	9.2	6.5

o 물흐름 효과의 양적인 측정

- 효과의 양적 측정을 위하여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의 시차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**96~00년에 비해 01~05년중 고소득층 소비의 하위계층으로의 확산효과가 1/3 수준으로 약화**된 것으로 평가

<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의 시차상관계수 >

	상위 20% 소비와 1분기후 중위 60% 소비	상위 20% 소비와 1분기후 하위 20% 소비	상위 20% 소비와 2분기후 하위 20% 소비
96.1/4～00.4/4	0.68	0.60	0.22
01.1/4～05.2/4	0.29	0.22	-0.28

* 96～00년 사이에는 상위 20% 소득계층이 소비를 100원 늘리면, 1분기후 하위계층 소비가 60원 늘어났으나, 01년 이후에는 상위 20% 계층의 100원 소비증가에 따른 1분기후 하위 20% 계층의 소비증가폭이 22원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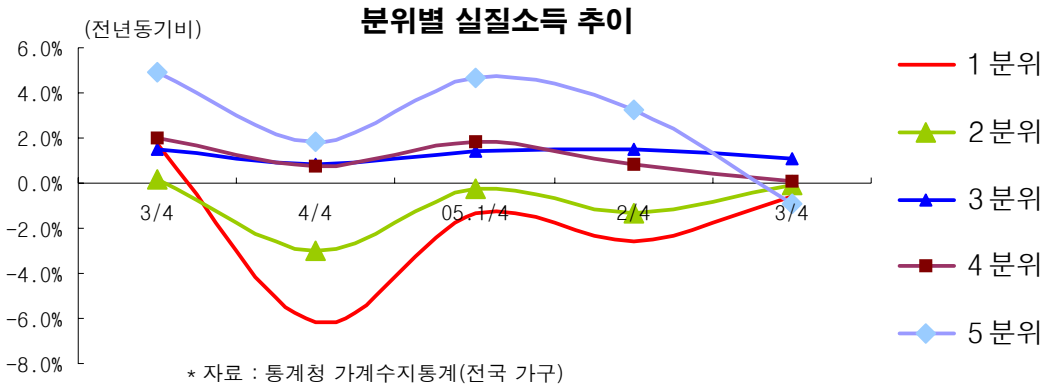
* 96～00년에는 상위 20% 계층의 100원 소비 증가가 2분기후에도 하위 20%계층의 소비를 22원 증가시켰으나 01년 이후에는 오히려 28원의 소비를 감소시킴

- **물흐름 효과가 약화된 것은** 고소득층의 해외소비 증가와 중하위소득계층의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 등 **구조적 요인에 기인**

  * 과거에는 중·하위계층의 소비가 약 1분기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, 현재는 2분기가 지났어도 회복조짐이 거의 없음

o 중하위 계층의 향후 소비 전망

- 고소득계층의 소비증가가 중하위계층에 전달되는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으나, **최근 중위계층(3~4분위)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시 이들 계층의 소비 증가가 전망**



* 05.3/4분기중 실질소득(%) : 1분위 △0.6, 2분위 △0.1, **3분위 1.1, 4분위 0.1,** 5분위 △0.9
(1분위: 하위 20%,, 5분위: 상위 20%)

※ 중위계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시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

* 분위별 평균소비성향(%, 05.3/4) : 1분위 152, 2분위 97, 3분위 84, 4분위 75, 5분위 66

- **저소득층(1～2분위)의 경우 고용구조의 양극화** 등으로 소득개선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소비가 아직 부진한 상황

	1～2분위	3～4분위	5분위	평 균
*실질소비증가율(%, 05.3/4)	0.0	1.1	2.7	1.3

- **다만, 1분위 계층에서 소비지출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, 1분위 가구중 일부가 그 상위계층으로의 이동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임**

	83~89년	91~97년	98~04년	05.3/4
* 1분위 교육비 비중(%, 소비지출 대비)	5.1	7.2	8.4	10.5

3 감세가 세수증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
(좁은 의미의 물흐름 효과 추정)

1) 이론적 근거 검증

○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세율인하가 **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**하게 하나

- 장기적으로는 **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**시키고 **조세수입을 증가**시킨다고 주장

⇒ **레이건 이후 미 공화당 정부의 감세를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**

* 레이건은 집권 기간 동안(1980～1988) 소득세 최고세율을 70→28%로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48→34%로 인하
* 조지 W. 부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세율을 종전의 최고 39.6%에서 35%로 인하하고 배당세는 2003년부터, 상속세는 2010년까지 단계적 폐지

○ 감세가 물흐름 효과를 통해 세수증대, 고용증대,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 **세가지 전제조건을 충족**시켜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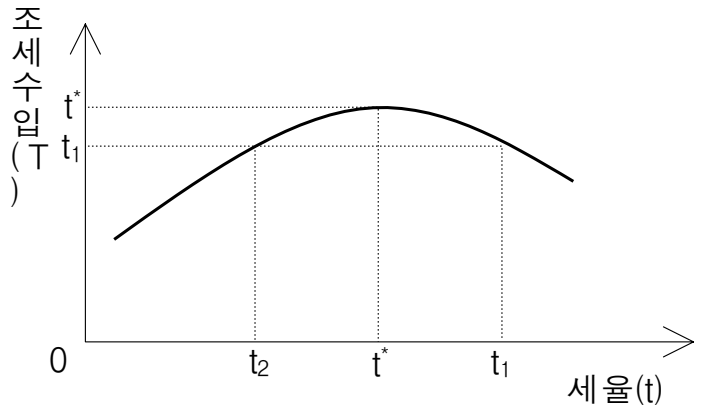
(1) 감세 → 근로의욕과 저축의욕 증대
(2) 근로의욕 · 저축의욕 증대 → 노동공급 · 투자 증대
(3) 노동공급 · 투자 증대 → 생산 증대 → 세수증대

⇒ **실증분석 결과 상기 세가지 전제조건 중 (1) 이외에는 통계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**

- (2) : 감세로 노동 · 저축이 증대되기보다 **여가 · 소비가 증대**되는 경향
  (노동-여가, 저축-소비 선택에 있어 많은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상회)
  * **노동-여가** : 적은 노동으로 감세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노동증가보다 여가 증가를 선택
  * **저축-소비** : 이자소득에 대한 감세는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저축보다는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

- (3) : 중장기적으로도 **감세로 인해 세수가 증대된 사례가 없음**
  * 미국의 경우 감세 전인 1979년과 감세 후인 1989년을 비교시 재정적자는 GDP 대비 1.6%→2.8%로,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.6%→40.6%로 확대
  * 감세와 조세수입간의 관계와 관련, 공급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Laffer Curve는 고세율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저세율 국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(Agell & Persson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감세로 세수입이 증대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)

<Laffer Curve>



2) 미국 사례 분석

○ 감세가 물흐름 효과를 통해 성장, 가계소득, 임금,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(1954~2002년간)를 **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**

⇒ (1) 소득세 최고세율 vs. GDP성장률 : 상관계수 0.03
(2) 소득세 최고세율 vs. 중위소득 증가율 : 상관계수 0.06
(3) 소득세 최고세율 vs. 시간당 임금 상승률 : 상관계수 0.34
(4) 소득세 최고세율 vs. 실업률 : 상관계수 0.11

*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관련변수들이 증가하였다면 상관계수가 -1에 가까운 값이 되었을 것임

○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

(1) 감세혜택의 귀착 : 부시행정부의 감세안('01~'07)으로 고소득계층 중에서도 **최상위 1%에 감세혜택이 집중** (미 의회예산처 04.8.13)

* 최상위 1%의 세후소득은 5.3%($40,990) 증가한 반면 하위 20%계층의 세후소득은 1.5%($230) 증가에 그침

(2) 감세와 경제성장 : 감세혜택이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 (Economy.com, 04.7)

* 감세에 따른 세입손실 $1당 0.74의 수요증대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침

(3) 감세와 고용창출 :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미약 (미 경제정책연구소, 04.9)

* '03년 감세안 통과이후 '04.8월까지 정부 예측치 430만개의 38%에 불과한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

(4) 감세와 재정적자 : '01년이후 시행된 정책 중 **감세정책이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**(57%)을 제공 (미 관리예산처 04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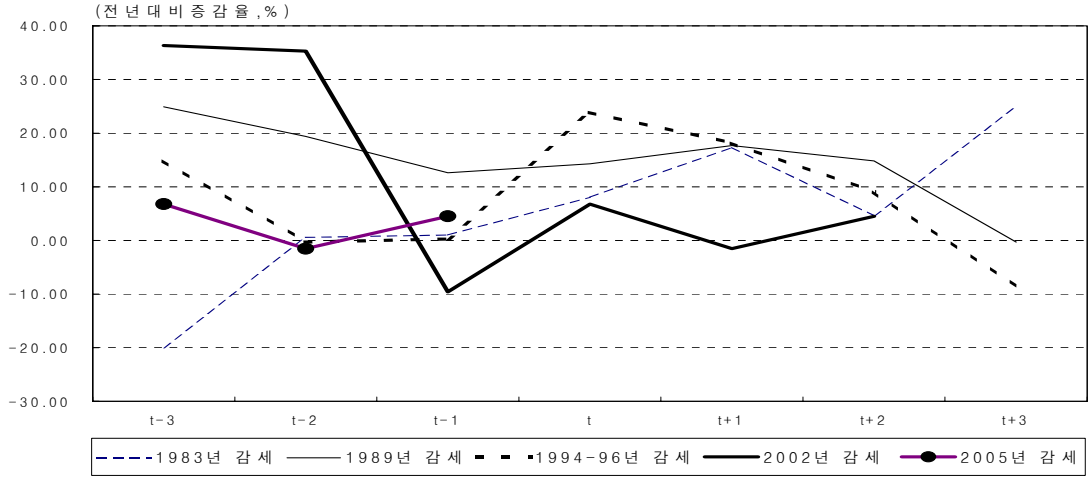
* '01~04년 재정적자 원인별 기여도 : 감세 57%, 세출증가 43%

3) 한국 사례 분석

① 법인세율 인하 효과

- **1983년의 감세사례를 제외하면** 설비투자 증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, **2002년** 감세도 전해의 급격한 **설비투자 하락세를 완화하는 정도**의 효과에 그침

< 감세정책 전후의 설비투자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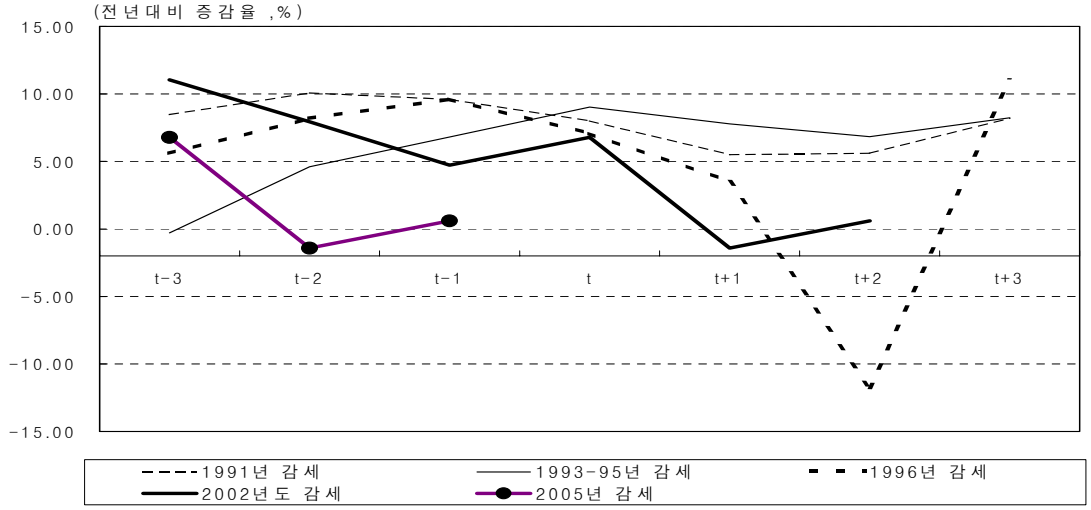


* 1983 : 5천만원 이하 22→20%, 5천만원 초과 38→30%
* 1994~96 : 1억원 이하 20→16%, 1억원 초과 34→28%
* 2002 : 1억원 이하 16→15%, 1억원 초과 28→27%

② 소득세율 인하 효과

- 3년간에 걸쳐 과세표준의 조정 및 소득세율 인하를 단행했던 **1993~95년을 제외하면 소득세율 인하후** 경제성장률 및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음

< 감세정책 전후의 실질 민간소비 변화 >



◇ 결론적으로, **해외소비 증가로 인해 고소득층 소비의 하위계층으로의 확산에는 한계**가 있으나 최근 **중위계층** 소득증가에 따른 **소비증가**가 기대

◇ **감세정책의 소비·투자·성장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**

- 수익모델 부재, 보수적 경영행태로 법인세 인하의 투자증대 효과 한계
- 높지 않은 세율로 인해 세수증대보다 큰 폭의 세수결손을 가져올 가능성